

IMF 구제금융

김도균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연구원

우리나라의 외환 위기에 대한 우려는 1996년 경상수지 적자가 2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전문가와 기업 등에서 제기되기 시작했다. 1997년 들어 한보, 삼미, 대농, 진로, 기아 등 대기업들이 잇달아 쓰러지면서 이러한 우려는 더욱 확산되었다. 이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멕시코 사태와 같은 외환 위기'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국내외에서 IMF 지원의 필요성론이 제기되었고, 1997년 11월 21일 IMF 구제금융 신청을 공식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IMF의 금융 재원은 회원국들의 통화, 특별인출권(SDR), 그리고 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재원은 회원국들의 부담금이나 차관, IMF 자원 이용료, 그리고 IMF의 SDR 소유 이자의 형태로 충당한다. IMF 자금의 이용은 목적에 따라 일반 지원, 특별 지원, 양허성 지원 등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이들 가운데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일반 지원은 국제수지 적자 해소

를 목적으로 지원된다. 일반 지원을 원하는 경우 IMF와 수혜국간의 '대기성차관협정'(Stand-by Arrangement)이 체결되어야 한다. 이 협정은 비공개협정으로 협정 체결시 회원국은 의향서를 통해 IMF가 제시하는 경제 안정화 프로그램을 수용할 것을 약속한다. 대기성차관협정의 지원은 평균 12~18 개월간 이루어지며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기금의 상환은 지원 후 3년에서 5년 사이에 이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IMF 차관의 도입 결정으로 IMF가 한국에 직간접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금액은 573억 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IMF 기금에서 210억 달러, 세계은행(IBRD)에서 100억 달러, 아시아 개발은행(ADB)에서 40억 달러와 기타 선진국에서 제2선 지원으로 233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 가운데 1997년 12월까지 IMF 기금에서 90억 달러, IBRD에서 30억 달러, ADB에서 20억 달러가 지원되어 총 140억 달러가 이미 지원된 상

태이다. 또한 자금의 조기 지원 결정으로 제2선 지원국들이 금년 1월 초에 8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가용 외환 보유고는 12월 24일 현재 87억 달러에서 1997년말~1998년 초에는 15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하여 만기 도래한 대외 채무의 기한 연장(roll-over)이 원활해지고, 환율이 안정되어 해외 투자 자금이 추가 유입될 경우 채무 상환 유예 선언(moratorium)과 같은 극한적인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IMF 프로그램을 수용할 경우 협상 조건이 근본적으로 총수요 관리 정책이라는 데 있다. 성장을 우선으로 하기 보다는 국제수지 불균형 및 그 원인이 되는 총수요 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이를 위한 재정·통화의 긴축 정책을 그 주축으로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제 무역과 금융 거래의 원활화를 위해 무역과 금융 규제에 대한 자유화 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외환 위기에 앞서 구제금융을 신청한 동남아 국가들의 경우 IMF 구제금융 지원 후 경제 상황이 오히려 악화되고, 이 여파가 동남아 국가 전체로 부작용이 파급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1997년 8월 IMF 구제금융을 신청한 태국

의 경우, IMF측 요구안을 대폭 수용하는 과정에서 재정 긴축으로 경기가 상당 기간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나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다. 그리고 재정 흑자 요구로 세수 확대 및 예산 축소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 경제의 고통이 그만큼 커지게 될 전망이다. 또한 1997년 10월 IMF 구제금융을 받은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도 IMF의 요구에 따라 부실 금융 기관의 정리 계획을 발표하고, 국민차 프로젝트를 수정하는 것과 함께 1998년부터 보리, 마늘, 콩 등의 곡물 수입 독점권을 포기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 지출의 감축, 물가 상승률의 억제를 실시하는 등의 경제적 수치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구제금융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미루어볼 때 우리 경제 또한 IMF체제 하의 향후 1~2년 동안 긴축적인 재정·금융 정책과 부실 금융 기관 정리로 결국 투자 위축, 금리 상승, 기업 정리와 실업의 증가라는 고통스런 조정 과정을 거칠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스스로의 개혁에 의한 조정에 실패함으로써 IMF의 긴축적인 프로그램과 더불어 조정 과정을 거처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 충격과 비용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1998년부터 경제 성장률이

우리 정부가 당초 생각했던 5~6%보다 훨씬 낮은 3%로 하락할 예정이고, 긴축적인 재정·통화 정책으로 물가와 금리가 오르는 스테그플레이션 상황이 일어나 우리 경제가 장기 침체 국면으로 빠지지 않을지 우려되고 있다. 그리고 IMF가 우리 경제 운용에 깊숙하게 개입하게 됨으로써 그동안 외국과의 통상 마찰을 빚어온 분야의 시장 개방이 가속화되고, 외국 기업에 의한 국내 기업의 적대적 M&A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또한 금융 기관들이 대출을 할 때 자기 자본 및 부채 비율, 캐시-플로우, 사업 성공률 등의 리스크 판단 기준을 크게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차입 경영이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경제 신탁 통치라 불리는 IMF 체제에서 시급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선 금융 기관들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에 따른 자기 자본 비율 높이기, 외형 위주의 영업에서 수익성 위주로 전환, 외화 자산 축소, 합병 시나리오 점검, 인원 및 임금 구조의 개편 등 다양한 수단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들도 불요 불급한 투자를 연기 보류하고, 자금 확보가 용이한 소비재 분야 등의 매출을 늘리는 한편, 향후 1~2 년내 금리 하락 가능성이

큰 만큼 장기 채권보다는 단기 채권을 발행하는 것과 같은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책 마련도 필요하고, 부채 비율을 낮추어나가면서 건전성을 확보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정부와 기업은 유휴 인력에게 산학 협동을 통한 직업 재훈련을 지원하고 또한 근무 시간의 단축과 봉급 인하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가능한 한 실업을 줄이고 고통을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어차피 일어나게 될 실질 소득의 감소를 국민들이 골고루 부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나 민간 부문 공히 조직의 정비, 인사제도의 혁신,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이루어야 하고 새로운 노사관계, 새로운 기업 문화의 정립을 통해 새로운 경제 사회 질서를 이루어나가야만 우리 경제의 앞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